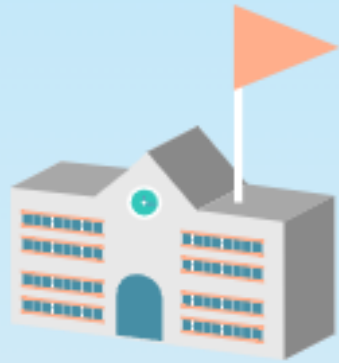


# 돌봄학교,



#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일시** 2024년 2월 23일(금)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강득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발제 |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 토론 | 이성희 KEDI 연구위원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영현 초등교사

정기웅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송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일 시 | 2024. 2. 23. (금) 오후 2시~4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 관 | 국회의원 강득구

주 최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프로그램 |

좌 장 | **강에스더**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발제

'늘봄' 정책, 모두의 '봄'이 될 수 있을까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토론

**이성희** KEDI 연구위원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영현** 초등교사

**정기웅**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송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 Contents

## **인사말**

**강득구** 국회의원 ..... 06

## **발제**

### **'늘봄' 정책, 모두의 '봄'이 될 수 있을까**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 09

## **토론**

**이성희** KEDI 연구위원 ..... 19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23

**정영현** 초등교사 ..... 31

**정기웅**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37

**윤송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 43

# 인사말



**강득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만안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현재의 늘봄학교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를 함께 공동주최해주신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교육부가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해 교원, 행정직, 공무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 간 견해가 달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원실에서도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학부모, 교직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4만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해서 학부모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나머지 교육 주체들은 반대하는 등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심층적으로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까지 각 교육주체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교육주체 간 이해관계와 입장이 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학부모의 부담감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2025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했던 정부에서 갑자기 2024년 전면 실시로 졸속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예산 그리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추진계획부터 발표하고 보는 방식은 교육 현장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반영하듯, 최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선정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부산과 전남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100%였던 반면, 서울의 경우 6.3%에 그쳤습니다. 늘봄학교가 모든 초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학교별로 그에 맞는 특성을 파악하는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질의 늘봄학교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교육 현장에 계신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좌장을 맡아주신 강에스더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함께 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귀담아 경청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 '늘봄' 정책, 모두의 '봄'이 될 수 있을까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 ‘늘봄’ 정책, 모두의 ‘봄’이 될 수 있을까

백 승 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 1. 들어가며

교육부는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2,000개 이상 늘봄학교 운영,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 예정이며 2025년 초등학교 2학년, 2026년부터 모든 학년의 초등학교 중 희망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정책으로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침 7시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 신설, 늘봄실무직원은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한시적인 기간제교사로 1학기 동안 전국 2,250명 배치 예정, 2025년 이후부터는 교육공무직으로 교체 예정 등입니다.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늘봄학교 1학기 2천 7백 여 개 도입’ 청사진은 빛바랜 사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월 6일 현재 1학기 늘봄학교 도입을 신청한 학교가 목표치 150곳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0여 개 교에 그쳤습니다. 이 추세라면 늘봄학교가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핑크빛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sup>1)</sup>

현장 학교가 늘봄학교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봄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망각해서가 아닙니다. 교육부의 계획이 학교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여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학교 도입 후 운영 과정에서 교원에게 일절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새 학기 업무분장을 마친 학교들의 전언으로는 학교마다 늘봄 업무 담당 교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의 흐름이 교육부 책상 위에서는 원활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학교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물줄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한시적 기간제 투입을 통해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 상반기를 자신의 시간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늘봄학교 업무는 당장에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에게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 교육부가 예상한 시간과 재원이 끝나면 오롯이 학교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대다수의 교원단체 및 노조뿐만 아니라 교육청노조, 교육공무직노조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늘봄지원실을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을 맡을 지방직 공무원 또한 늘봄학교 시행 전 확실한 인원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sup>2)</sup>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또한 법과 제도의 체계화, 인력의 안정성,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보장 없는 늘봄학교는 현장 피해를 초래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sup>3)</sup>

1) 교육연론창(2024.2.6.). 늘봄학교 내달부터 2700개 운영? 서울은 30여 곳만 신청

2) 공생공사(2024.1.25.). “늘봄지원실 만들고 교원에게 안 맡기면 그 업무는 누가 맡나?”

3) 교육플러스(2024.2.1.). 교육공무직·학비노조, 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요구 중단 촉구.

한편, 현재 늘봄학교에 대한 담론은 대부분 공급자의 시각에서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봄학교의 실제 이용자인 학생에 대한 배려와 염려는 교육부는 물론 언론에서도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들이 아침 8시부터 캄캄한 밤 8시까지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며 하루 세 끼를 학식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학생으로 인해 존재하는 교육부가 세운 계획이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까지 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일까요. 벌써부터 늘봄학교는 합법적인 아동학대라는 주장까지 대두되는 형편입니다.<sup>4)</sup>

늘봄학교 정책이 기동 없는 지붕으로 전략해 가는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과 함께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직, 돌봄공무직 등 늘봄학교를 둘러싼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하부터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실시한 늘봄학교 교육 주체 대상 설문 결과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늘봄 학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2. 늘봄학교 정책이 지닌 맹점

### 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정책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계획에서는 이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방과 후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돌봄 업무는 돌봄전담사가 상당 부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와 돌봄 업무의 확장판인 늘봄학교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인력 확보와 충원의 계획 미흡은 모두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장 1학기에는 한시적인 기간제교사 2,250명을 채용하여 대응하겠다고 하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다가올 2학기 전면 실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한시적 기간제교사 구인은 결국 학교의 업무로 정착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위하여 각 학교가 구인공고를 내고 있으나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sup>5)</sup> 일부 시도의 경우 2차, 3차까지만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지원하고 채용이 안될 경우 교사에게 업무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이 발송되기도 했습니다.<sup>6)</sup>

늘봄학교가 아니어도 단위 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채용할 준비를 마쳐도 지원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수고로운 일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옮겨 간다 하더라도 기간제 교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2월과 8월의 학교 현장에 가 보았다면, 아니 몇몇 교감 선생님들에게만 물어 보아도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4) 천지일보(2024.1.27.). “늘봄학교, 발상 자체가 아동학대”... 초등교사노조 서울 도심 집회.

5) 뉴스핌(2024.1.29.). [단독] 학교 채용 안한다고 하더니, 전국 6개 시도 학교 늘봄교사 직접 구인.

6) 뉴스핌(2024.2.2.). [단독] 부산·인천·충남교육청, '늘봄 기간제 미채용' 시 교사에 업무 부과

## 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가 상당하여 대기자가 넘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수요가 적어 돌봄 자리가 남아도는 학교 또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돌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심 학교는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돌봄교실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교육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실이 적거나 없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정규수업 이후 교실을 내주어야 하기에 수업 연구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리한 돌봄의 양적 확대로 인해 정규 교육과정마저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7일, 늘봄학교 정책에 인력과 공간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특별실, 도서관 등 확보 가능한 여유 공간을 학교 여건에 맞게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도입되는 2시간 이내의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담임선생님들의 협조하에 일반 교실을 이용하고, 이에 대응하여 교원 연구공간을 확충하고, 학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sup>7)</sup>

하지만 이것은 대책 없는 대책입니다. 첫째, 특별 수업 교실, 학생 도서관 등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곳은 다채로운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 상존해야 하는 필수공간입니다. 늘봄학교를 위해 모든 학생이 이용해야 할 필수적 교육 활동 공간을 내어주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일반학급 활용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반학급을 늘봄 공간으로 먼저 활용할 것이 아니라 교원 연구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일반학급을 늘봄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농어촌 학교의 경우 늘봄학교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농어촌 학교는 교통 여건 등 접근성이 낮아 인력 채용 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고, 표시과목 범위를 확대해 채용의 문을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교원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 다. 담보되지 못한 법적 근거와 예산

늘봄학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교육 부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sup>8)</sup>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방과 후 활동에 초등돌봄교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기에 학생의 안전과 프로그램의 관리, 종사자의 처우 등이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sup>9)</sup>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1.27.).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에 인력·공간확보 대책없다?…사실 아냐”.

8)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9) 국회입법조사처(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8권.

누가 책임자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봄학교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학교·교육청·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떠넘기기의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의 미약은 예산 확보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는 2026년까지 연차별 재정 소요추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sup>10)</sup> 현재 방과후학교는 보통교부금으로, 늘봄학교는 일부 특별교부금으로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더라도 이러한 특별교부금이 언제까지 지원 가능할 것인가가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도입된 정책은 선불리 없애거나 축소하기 어렵기에 각 시도는 특별교부금 지원이 끊기더라도 보통교부금에서 예산을 충당하여 늘봄학교를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실 및 학교 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마련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보통교부금 예산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늘봄학교 전면확대 계획이 발표되었어야 합니다.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0.8% 상향하여 증가분을 초·중·등 교원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약 5,300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야 합니다.

#### 라. 선(先)발표 후(後)대책

늘봄학교는 다양한 교육주체와 관계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교육주체와도 논의없이 대대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많은 교육주체의 반발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정책은 2004년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점차 확대되어 온 정책입니다. 초등돌봄정책 변동을 살펴본 최근 논문에 따르면 정부가 돌봄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책 결과를 산출하는 데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sup>11)</sup> 기존 돌봄 정책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늘봄학교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로 작성된 교육개혁안을 성급하게 추진하게 될 때 결국 교육 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문제만 파생시키게 된다”<sup>12)</sup>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으로 인해 교육계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10) 교육부(2023.1.11.). 늘봄학교 추진방안.

11) 강숙, 이승호(2023). 초등돌봄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친 옹호연합의 신념체계 분석. 초등교육연구, 36(4), 29-55.

12) 이수정, 변영임(2021: 310).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8(1), 295-316.

### 3. 대안은 무엇인가?

#### 가.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 마련

2025년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 완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당장 2024년 2학기에 투입될 늘봄전담 실무인력은 누구인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인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십시오.

한편 늘봄 업무담당 및 강사를 희망하는 정규 교원이 있다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설문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비중은 적지 않습니다. 늘봄교사를 희망하는 정규 교원은 강사로 참여할 수 있게 열어두고 적절한 수당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여 오후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 늘봄 업무 및 강사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승진가산점은 학교 현장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일 뿐입니다. 대다수 교원이 승진가산점 부여에 반대하고 있는 설문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승진가산점이 아닌 적절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승진가산점은 달라진 사회 환경과 교사 집단의 인식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적절한 유인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연구보고서를 보면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젊은 교사들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sup>13)</sup>

#### 나. 시도교육청의 재량권 부여

시도교육청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운영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부 차원의 늘봄학교 운영모델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밀학급이 많은 도심형 모델,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형 모델 등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중점형, 학교 공간만 활용한 교육청 및 지자체 운영형, 민간기업 위탁형 등 운영주체와 운영장소의 다양화를 강구해야 합니다. 경남에서 운영 중인 거점통합돌봄센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sup>14)</sup>

또한 아침 7시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명시된 늘봄 운영시간도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방과 후 수업과 돌봄 이용 시간대를 보면, 오후 5시 이후 급격하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15)</sup> 따라서 초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보다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13) [서교연 2023-89] 『서울교원총단연구 2020』 3차년도 시행 및 결과 분석\_교사의 세대별 특성을 중심으로

14) 경남 거점통합돌봄센터늘봄리플렛(2023.10.13.).

15) 이해숙 외(2019).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2019-PR-04). p: 58.

## 거점통합돌봄센터란?

### 거점

구도심 학교의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거점으로 지정하고  
인근 10개 학교의  
돌봄 수요를 수용함

### 통합

맞춤형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한  
방과후-돌봄  
연계서비스를 제공

### 돌봄 운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평일(방과후~20:00),  
방학중(08:00~20:00),  
토요일(08:00~13:00) 돌봄 운영  
※ 수시(몇 일 간)-특새(몇 시간 동안) 돌봄 운영

## II 놀봄의 모습



### 다. 법적 근거 마련

놀봄학교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칭 놀봄학교법에는 놀봄학교의 운영 방안, 책임 주체, 안전 대책 마련 등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고려하면 학교를 안전한 곳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에서 학교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학생들이 머무르는 것을 감안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과 지원 인력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라. 교육과 돌봄의 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합의를 위한 노력

돌봄과 놀봄을 바라보는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직, 돌봄 공무원 등의 시선은 저마다 다른 데다가 복잡하게 엉켜 있기까지 합니다. 특히 교원과 그 외 집단 간에는 교육과 돌봄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교원은 돌봄을 교육과 분리하여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과 돌봄이 뒤섞인 학교 교육까지 왜곡하는 자가당착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은 교육의 연장 선상에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또한 돌봄을 전제하고 이루어집니다. 교육과 돌봄은 생각만큼 무자르듯이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교원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벌이 학부모인 교원들



은 이 점을 삶 속에서도 확실히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 돌봄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이에 대한 담론과 철학도 정립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돌봄을 정착역 없는 급행열차에 신지 말고, 지속적인 논의와 숙고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심리적 공간을 마련해 주고, 교원과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4. 나가며

프랑스의 초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4일제 혹은 4.5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sup>16)</sup> 학교에 가지 않는 수요일에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배우고 있습니다.<sup>17)</sup> 자녀들이 의미 있는 활동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의 픽업을 담당합니다. 프랑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맞벌이 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 4일제, 4.5일제 학교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의 수요일은 오전만 출근하거나 온종일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사회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머물기보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보다 정서발달상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직장에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단순히 공공돌봄의 확대만으로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sup>18)</sup>는 지적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돌봄의 양적 확대보다 돌봄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작년 늘봄 시범운영 학교를 통해 나타난 문제는 돌봄의 질, 인력 수급, 공간 부족 등으로 늘봄학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과 대책 없는 무리한 늘봄학교 전면확대는 늘봄학교의 취지인 저출산 대응의 효과 또한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계 내 갈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늘봄학교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된 늘봄학교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 교육정책네트워크(2018.8.29.). 프랑스 초중등학교 학생의 하루 일과.

17) EBS NEWS(2021.6.9.). 프랑스에서 수요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그렇다면 노는 날인가?

18) Babynews(2022.7.21.). "엄마 아빠 늦게 오면 공적돌봄 확대해도 문제 해결 안 된다".



# 토론 01

---

**이성희**

KEDI 연구위원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

# 토론 02

---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 학교의 모습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 1. 보편적 돌봄을 담은 늘봄학교 - 아동의 보편적 돌봄권

지난 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서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되어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이다.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 해결하던 돌봄을 공적인 영역으로,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는 양육자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의 기본권으로서 보편적 돌봄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은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혹은 가족구성원의 조건에 따라 아동의 돌봄권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한부모, 맞벌이, 조손가정, 저소득층등, 부모의 경제적 조건, 가족구성원의 조건, 양육자의 경제활동의 조건등.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에서부터 아동의 돌봄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입니다.

그동안 조건에 의해 시행되던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은 맞벌이와 외벌이 등의 양육자 갈등을 조장해왔고 결국 초등학교 돌봄 문제는 결국 맞벌이 가정(돌봄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한정된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의 문제라고만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돌봄 공백이 없는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외벌이 가정이라고 돌봄 공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양육자는 로봇이 아닙니다. 양육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픈 양육자가 있을 수 있고 학업을 하는 양육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중 돌봄을 하고 있는 양육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 많은 변수와 수 많은 긴급상황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겠죠.

그렇기에 어떤 조건에 의한 돌봄권이 아닌,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돌봄은 양육자, 그리고 아동의 기본권리로 여겨져야 합니다.

1학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넘어서 점차 학년 제한없는 늘봄교실을 구현한다는 발표는 현재 1,2학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초등방과후 교실을 확대하고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활짝 열린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획기적인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2. 학교라는 공간의 재구성\_아동 중심으로 재구성

‘학교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동학대다.’ 라는 주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육자로서 매우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학교는 누군가에게는 근무를 하는 근무지이겠지만, 학생들에게는 매일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렇기에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이제는 아동친화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학습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전인적인 발달과 사회구성원으로서공동체 의식이 길러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관점으로 학교라는 공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또한 이러한 요구를 담은 공간을 재구성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권리적 측면에서 초등돌봄은 놀이와 충분한 쉬이 함께 하는 초등 돌봄이어야 합니다.

아동 발달과 장애 유무를 고려하여 활동에 적합한 공간의 크기·밝기·안전을 고려한 설치 기준과 여건을 마련하고 예산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 편차게 생기는 것이 아닌,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어디서든 양질을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면적기준(아동 1인당 3.3㎡ 이상)에 준한 생활공간 보장

△ 바닥 난방, 좌식 탁자, 침구류, 환경친화적 교재·교구 구비 등 아동이 놀 권리와 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

## 3. 양질의 돌봄 제공

보편적 돌봄권을 담은 늘봄학교를 환영하는 바 이지만, 지금의 체계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면 우려

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초등돌봄은 신청자격이 있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모두 초등돌봄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뽑기운’에 의해 아이들의 돌봄권이 내맡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뽑기운에 맡겨진 아이들의 돌봄권으로 인해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져서 초등1학년 돌봄을 육아휴직으로 해결하거나, 사적 영역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예비초등생활을 앞두고 즐겁고 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맡아줄 학원을 알아보는 양육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운이 좋은 것’ 이 되어버렸기에 내 아이를 5시까지 맡아주는 초등돌봄교실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육자들은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양질의 돌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어쩌면 양육자들에게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겠다는 늘봄 학교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표된 교육부자료에 따르면 기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교실당 몇 명의 아동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건지, 돌봄전담는 1교실당 몇 명으로 배치가 되는 것인지, 교육부의 발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돌봄을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1교실당 2전담사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틈새돌봄’의 특성상 학생 출입이 빈번하고, 하교 시간이 제각각인 늘봄교실의 현실 속에 아동의 안전권과 늘봄전담사의 노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2 전담사 제도’는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 늘봄교실 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10명 당 늘봄전담사 1명으로 상향 (학생 10명 초과 시 늘봄전담사 1명 추가 배치)

또한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늘봄교실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급식법에 따른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가 늘봄학교 급·간식 관리

△ 방학에도 도시락·매식 대신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한 급식 제공

#### 4. 성공적인 늘봄학교를 바라며

늘봄학교가 당장 실현 가능한가, 라는 의견에 있어서 여러 우려 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입학 후, 혹은 개학 후 아이의 돌봄을 어떻게 해결 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양육자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도 쓸 수 있으면 운이 좋은 양육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

한 양육자들은 일을 그만두고 결국 돌봄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은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가정은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렇기에 늘봄학교는, 양육자에게 절실합니다. 모든 양육자와 모든 아동들을 위해 실현되어야 되는 늘봄학교입니다.

하지만 양육자로서 우려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과 공간, 그리고 인력배치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양육자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운휴교실이 없는 경우 학교 내에 늘봄학교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기준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돌봄전담사의 배치기준 또한 나와 있지 않아 한 교실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모듈러를 설치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발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늘봄학교 시행에 맞춰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공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행정인력이 아닌, 실제로 돌봄을 하는 돌봄전담사 인력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더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돌봄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구체성, 지속성이 담보가 되는 학교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늘봄학교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여 돌봄전담사와 그리고 늘봄학교에 보내고 있는 양육자도 학교 운영에 늘봄학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합니다.

늘봄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고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늘봄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그리고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행복한 늘봄학교가 되기 위해 서로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협치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돌봄이 따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안에 돌봄이 있고 돌봄이 없는 교육은 없습니다. 학교는 국가가 정한 교과과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돌봄, 연대, 평등, 학생의 다양한 가능성을 배워나가는 공간입니다. 이번 늘봄학교 추진이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자 경쟁을 우선해온 그간의 교육 방향에서 상호돌봄과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의 전환으로 가는 길목이길 바랍니다.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여러 저출생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와 함께 돌봄사회화, 돌봄공공성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현재 태어날 아이와 양육자에게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충분히 돌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해서 내 아이가 어디서든 안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만드는 것. 내 아이가 언제 아파도 내 아이를 돌봐줄 의료시스템이 있는 것. 사교육 시장에 맡겨진 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 나가는 과정, 내가 경제활동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내 아이의 돌봄권에는 차별이 없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현재 주 69시간의 노동시간을 이야기 하면서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양육자들은 장시간 일하고 아이들은 다른 이의 또 다른 돌봄 노동으로 장시간 내맡겨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늘봄학교 시행과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이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형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물론 현재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늘봄학교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고싶은 늘봄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고 싶은 공간이고, 남고 싶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봄학교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늘봄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도 모두가 남고 싶은 늘봄 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토론 03

---

**정영현**  
초등교사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 늘봄학교가 학생에게 진정 ‘늘 따뜻한 봄’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

정 영 현

관문초등학교 교사

‘22년 합계 출산률 0.78으로 한 명의 아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절실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이 심각하다는 점, 학부모 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사교육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늘봄학교의 도입 배경은 이해됩니다<sup>1)</sup>.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나 협의없이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강득구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4만2천여명의 교육주체(학부모, 교직원)를 대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sup>2)</sup>. 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1.9%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답했습니다. 한편, 초등학교 학부모는 찬성 49.6%, 반대 36.3%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부모 집단이 나머지 교육주체 집단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1월 실시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 학부모 5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sup>3)</sup>에 따르면, ‘늘봄학교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83.6%로 ‘예비’ 학부모들의 늘봄학교 수요는 ‘기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수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집단이 타 교육주체에 비해 늘봄학교를 찬성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고, 교육 주체 간에 늘봄학교에 대해 이해관계와 입장이 저마다 다르기에 교육주체와 해당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점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비 학부모와 기존 학부모 간에 찬성 비율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존 초등방과후나 돌봄을 경험해 본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차이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sup>4)</sup>. 즉, 진정 늘봄학교가 학부모 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라면, 기존 방과후와 돌봄 정책을 꼼꼼하게 복기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고 늘봄 브랜드로 통합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2024.02)에서도 늘봄학교의 도입배경을 보면, 기존 방과후와 초돌봄을 통합해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렇기에, 진정 늘봄학교가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sup>5)</sup>가 될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는 <표 1>과

1) 교육부(2024.02). 늘봄학교 추진방안.

2)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만2천1명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37.3%, 초등학교 교원 26.4%, 교육행정직원 14.4%,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부모 8.9%, 돌봄공무직원 5.2%,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교원 3.9%, 기타 3.8% 순

3) 교육부(2024.02).

4) 홍섭근(2024.02.14.). 늘봄학교, 저출산 대책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 늘봄학교 논란과 갈등속의 학교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같이 방과후와 돌봄 정책을 복기하고 늘봄학교가 그 정책의 전철(前轍)을 밟지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 비교<sup>6)</sup>

구분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정의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	2004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홀로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에서 처음 시작
변천	-1995.5.31. 교육개혁:특기적성교육 등 방과후교육활동 운영( ~2003년) -2004.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2005.3: 모두 방과후학교로 통합, 48개 초·중·고에서 시범운영, 2006년 방과후학교 전면 실시	-2004: 사교육비경감 위해 발표, 저소득층·맞벌이 저학년 학생 대상, 수익자부담 시범운영 -2006: '초등보육교실'로 명칭변경 -2009: '온종일돌봄교실' 시범(야간) -2010: 초등보육교실+ 온종일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통합 -2014: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정책으로 고학년까지 확대, 돌봄 무상, 급식·간식비용은 수익자부담 -2017: '온종일 돌봄' 전학년확대 -2018~2022: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계획' 수립
공간	일반교실, 특별실 등	돌봄교실
인력	교원, 외부강사	돌봄전담사, 외부강사
비용	수익자 부담	무료
이용방식	프로그램별(1~2시간) 신청·이용	단일신청, 오후 내 이용(주요1~5시)
문제점	공간 등이 달라 방과후와 돌봄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 발생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방과후는 2006년, 돌봄은 2004년부터 각기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돌봄은 20여년을 거치면서 현재의 전학년, 온종일 돌봄 체제를 확립하였으나, 2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공간 등이 달라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 토론자는 교육 현장의 주체로서 문제의식을 갖게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의 추진속도가 빠릅니다.** 기존 20여년간 추진되던 방과후와 돌봄을 늘봄학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추진배경은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발제자께서 원고에서 제시하셨듯이,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적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는 교육주체의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강득구의원실·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늘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5) 교육부(2024.02).

6) 교육부(2024.02), 김소라(2021). 초등돌봄교실 공간구성특징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8(6), 3-13.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3%인 34,550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보면 '늘봄' 브랜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력, 공간, 조직 등이 변화하는데, 세부적으로 1학기 기간제 2,250명 채용도 어렵거니와, 그 이후 2학기 전면 실시 이후의 모습은 어떨지도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정책과 제도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개혁추진과 관련된 제도 내외적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시차적 요소들을 분석한 뒤 이에 맞는 변화 전략을 시기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sup>7)</sup>. 진정 늘봄학교가 학생에게 '늘 따뜻한 봄'이 되려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고 현장에 내려보내는 것에만 초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적·맥락적인 변수와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요소를 세심하게 교육주체와 협의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학기를 앞둔 지금, 늘봄학교 기간제 채용도 교육부에서 시급 4만원 상한선을 책정해도 쉽지 않습니다<sup>8)</sup>. 더욱이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강사 풀의 교육청 확보, 늘봄학교에서 학폭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 여부, 법적 근거 정비 등 세부사항을 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대상 집단인 교육주체와 협치과정이 포함되야 합니다.** 여기 토론회에 모이신 분들은 '늘봄 학교' 정책과 관계되는 교육주체이십니다. 발제자께서 원고에서 언급하셨듯이, 이 정책이 '선(先)발표 후(後)대책'이란 점에서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주체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열린토론형 참여구조, 즉 진정성을 가진 협치접근으로 해당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돌봄의 의미와 가치 실현인 '늘봄'을 실현하기 위해선 교원과 공무원, 학교비정규직, 학부모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의 관점도 고려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2024.02, p.21)에 따르면, '24년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추진 등에 따라 최소 총 1조1,657억 소요(특교 2,469억, 보통 9,188억)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세금이 쓰이며,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본래의 정책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주체의 열린 토론형 참여구조인 공론의 장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현장의 교육주체로서 드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현행 방과후 돌봄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이 교육부(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 4~중 3),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18세미만, 초·중 재학 아동)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설·인력·관리 책임에 대해 반드시 '학교 안'에서만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지와 현재 늘봄학교가 학교 안에서 돌봄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 각종 업무가 가중되어 교사는 정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월 실시된 설문조사(강득구의원실·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도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교육주체 중 누구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8,338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43.8%가 '교원'이라고 답했습니다<sup>9)</sup>.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관과 개인이 교육과 돌봄에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

7) 정정길, 정준금(2003).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행정논총, 41(2), 177-202.

8) 머니투데이(2024.2.19.). "시급 4만원, 늘봄 선생님 구합니다"...개혁 앞두고 '발등에 불'

9) 초등학교 교원은 86.9%가 교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돌봄공무직은 83.8%가 돌봄공무직을, 교육행정직은 70.2%가 교육행정직이라고 답했다. 즉, 교원과 돌봄공무직, 교육행정직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자신들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나 학폭 등을 비롯한 제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상체제를 갖추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주관할 기관을 명확히 해졌어야 합니다<sup>10)</sup>.

**마지막으로, 돌봄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학생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sup>11)</sup>. 만약 집이 아니라고 하면, 집 근처 아파트 내 지역아동센터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처럼, 시도교육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각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진정한 돌봄·교육·성장을 위한 길입니다.

---

10) 박남기(2022). 윤석열 정부 초·중등교육 정책 및 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34(2), 59-89.

11) 교육플러스(2024.1.14). [교육이슈+]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교육적 관여, 아동의 학교 적응에 얼마나 영향 미칠까?

# 토론 04

---

**정기웅**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 늘봄학교는 교육인가 보육인가?

- 늘봄학교는 교육주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 양질의 프로그램도 제공되지 못한 채 교육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다

정 기 응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1. 도입

정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늘봄처럼 따뜻한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발표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짐으로 초저출생이 심화되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개선하여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자하는 도입 취지는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늘봄학교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주체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없이 하향식 정책 추진이야말로 납득할 수 없는, 구시대적 발상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 2. 늘봄학교 도입의 문제점

### 첫째.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교무실과 행정실 외에 늘봄지원실을 만들어 교사의 업무부담을 덜고,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학기에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당하게 하고, 2학기는 늘봄실무를 담당할 공무원과 공무직을 채용해 늘봄 실무를 담당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늘봄을 보육의 개념으로 보고 학생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별도의 늘봄지원실을 두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며 기존 오후 5시까지 운영되던 돌봄을 저녁 8시까지 이용시간을 늘려 맞벌이 가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규시간에도 끊이지 않는 학생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늘봄 운영시간에는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는 것인가? 늘봄 학생들은 정규교육과정의 학생과 정녕 다르단 말인가?

늘봄학교 운영으로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등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 **둘째. 교육주체가 반대하는 늘봄정책,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강득구 국회의원, 교육주체 4만2천여 명 설문조사 결과, 61.9%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반대”

- 교육주체 82.3%, “늘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 강득구, “교육주체간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 존재... 사회적 합의 거쳐서 대대적 재검토 해야 안정적 추진 가능”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논의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 간 4만2천1명의 교육 주체(학부모, 교직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만2천1명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37.3%, 초등학교 교원 26.4%, 교육행정직원 14.4%,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부모 8.9%, 돌봄공무직원 5.2%,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교원 3.9%, 기타 3.8%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반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도입 찬성 49.6%, 도입 반대 36.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나머지 교육 주체 간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관리 책임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5%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돌봄공무직 21.5%, 제3의 모델 15.3%, 교원 14.2% 순이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 업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2,879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78.3%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행정직의 경우 96.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미 학교 현장은 교육주체 간 갈등이 팽배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늘봄학교의 전면도입으로 인해 모든 교육주체는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교육주체 중 누구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



문에 18,338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43.8%가 '교원'이라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86.9%가 교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돌봄공무직은 83.8%가 돌봄공무직을, 교육행정직은 70.2%가 교육행정직이라고 답했다.

즉, 교원과 돌봄공무직, 교육행정직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자신들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3%인 34,55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늘봄학교는 교육주체 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을 희망하는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부모, 초등학교 교원, 교육행정직, 돌봄공무직원 등 이해관계와 입장은 저마다 다른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 **셋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효과성을 높일수 있을 것인가?**

늘봄의 성패는 시간보다는 학습의 질에 달려있다. 교육부는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시지역은 제외하고 외곽에 위치한 학교는 낮은 강사료로 인한 구인난으로 결국 교사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임에도, 교육부는 교원 업무경감을 이유로 교사를 늘봄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다.

이는 결국 교육보다 보육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학습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한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16일자 언론의 소식에 따르면 워킹맘 홍모씨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로부터 초등학교 때 돌봄 교실이 제일 싫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직장을 다니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에게 돌봄교실은 대기번호를 받고 힘들게 들어간 행운이었으나 정작 아이에게는 원치 않는 불운이었다는 것이다. 아이는 학교에 혼자 남겨질까봐 불안해하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고 말한다.

정작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를 위한 늘봄학교는 없다는 것이다.

### 3. 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가장 우선은 돌봄의 주체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저녁이 있는 삶과,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도록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집 밖에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학교에 늘봄학교를 강제 시행하려는 것이 문제다.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나 돌봄 센터 등 복지부, 행안부, 여가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함께 돌봄 정책에 협업해야 한다.

일방적인 교육부 정책으로 학교에서 주도, 담당하라는 식의 강제 운영이 아니라, 전문 인력과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점통합돌봄센터(경남형) 운영으로 돌봄 확대 및 인근학교 간 돌봄 공동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겠다.

무상 단체 프로그램, 쉽고 창의성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 전문상담사에 의한 심리상담 지원 등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돌봄 제공을 위해, 교육부의 일방적 늘봄학교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토론 05

---

**윤송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 늘봄학교 전면 확대시행에 대한 교육공무직의 입장

윤 송 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돌봄분과장

## 1. 총선용으로 던지는 졸속적인 전면 확대시행은 반대합니다.

충분하고 안정적인 인력의 확충과 운영체계 확립, 공간마련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미진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애초 계획대로 2024년까지 미비점을 찾고 준비를 갖춰 2025년 이후 전면 시행이 바람직합니다. 현재의 성급한 전면 시행은 과도기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교육부의 말과 달리 돌봄전담사에게도 업무를 과중시킬 우려가 큼니다.

## 2. 우울감만 조장하는 07시 아침돌봄과 20시까지 연장형 저녁돌봄을 반대합니다.

양육자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 폐기해야 합니다.

불안정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가정의 돌봄 기능이 해체된 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며 우리 아이들의 불행입니다. 초등돌봄은 필수적이지만, 불행을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까지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학교돌봄과 같은 공적돌봄과 가정돌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그 전에 당장은 불가피성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수년 내에 지나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07부터 20시까지 돌봄을 늘봄학교의 핵심 방향으로 홍보하고, 언론과 주제 발표 문조차 그렇게 늘봄학교를 인식하게 돼버렸습니다. 늘봄학교의 요체는 전일제학교를 제도화한다는 점인데,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하는 모든 학생은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방과후과정의 다양성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정책방행의 핵심을 강조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07시와 20시 돌봄이라는 표피적인 득표 효과만 강조하고 있어서 논쟁을 키웁니다. 아무튼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은 아이에게도 불행입니다. 반대합니다.

## 3. 돌봄교실 정원을 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열어주는 것도 반대합니다.

아이들과 돌봄전담사 모두에게 과밀 돌봄교실의 고통을 안깁니다.

이 점은 주제발표문에도 언급이 없는 것처럼 교사분들도 잘 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공간 문제가 가장 고민이고 난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대기인원 없이 저학년 희망자 전원을 방과후

과정(늘봄학교)에 수용하려고 돌봄교실 정원 기준(20명 내외 또는 이내)까지 허물고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로 열어줌으로써 과밀 돌봄교실을 감수하라고 합니다. 전면 시행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충분한 준비시간을 두고 공간을 더 확보하고 돌봄전담사를 더 확충하여 추진할 일이지 아이들을 과밀 돌봄교실에 밀어 넣고 대기자 없다고 생색내고, 돌봄전담사의 업무 강도도 높이는 희생으로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 **4. 학교도서관과 특별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방식에 반대합니다.**

특별실은 여유 공간이 아니라 고유의 교육 목적을 갖는 공간이라는 주제발표문에 동의합니다.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돌봄교실로 1~2시간만 쓴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서와 사서교사의 고유한 업무를 저해하거나 돌봄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본연의 기능과 돌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공간을 쓰겠다면 독서교육을 늘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치해 사서(교사)에게 프로그램 운영 수당이라도 지급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의 가능한 방안 없이 그저 문제를 감당하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대합니다. 전용교실 중심으로 획기적인 방과후공간 창출이 필요합니다.

#### **5. 늘봄지원실 등 늘봄학교 운영과 행정업무는 교육공무직 인력 중심 체계가 바람직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인력으로 배치해서는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을 배치해도 문제입니다. 돌봄교실 등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낮은 뿐만 아니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집단 간 위계와 서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게다가 돌봄교실 운영 당사자를 배제한 채 운영방식이 정해지는 소외도 발생할 것입니다.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경험을 축적해왔고 교육공무직과 동료 의식이 높은 인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사·공무원이 말하는 부가적인 업무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 **6. 확대된 사회적 책임과 정책의 위상에 맞게 늘봄학교 인력의 처우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중 기본급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이 20만원 기본급이 높습니다. 1유형은 전문 자격을 갖추거나 교사 대체직종으로 분류합니다. 교사가 일하는 직종이고 자격을 갖추고 입사해야 하는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의 돌봄전담사도 1유형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2유형입니다. 이제 서울 못지않게 전국적으로 돌봄전담사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이 높아졌고, 업무 범위와 부담, 역량도 증대됐습니다. 늘봄학교로 인해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공무직이 늘봄학교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노사 갈등은 지속되고 정책 지속성은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일제 전환 근무여건 개선도 필요합니다. 5~6시간 근무

제로 묶어놓고 더 많은 역할과 더 좋은 돌봄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 **7. 계속되는 정책차별, 이젠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기간에 앞서서 지적한 문제를 계속 제시하고 개선 요구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늘봄지원실 구축이 교육공무직본부의 요구를 반영한 대책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늘봄지원실은 늘봄학교를 하자면 필수적인 체계지 교육공무직의 요구를 반영해 만들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교사단체의 요구에 따라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한다는 건 교육부 정책 곳곳에 반영해 강조합니다. 늘봄학교를 맡지 않는 교사를 위한 대책은 강조해 제시해놓고, 정작 늘봄학교를 맡아 운영할 교육공무직에 대한 대책은 단 한마디도 없는 게 상식적인 태도일까요? 이게 차별이 아니면 뭘까요? 이런 식으로 교육당국은 근로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집단 간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만하지 않는 정책협약이 이뤄지고 적극적 의견 반영이 있어야 합니다.

## **8. 교육청과 교육공무직의 협의 추진 여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성급한 졸속추진, 찍어 내리는 방식의 강제 추진은 안 됩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큰 방향성 아래 교육청과 교육공무직이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요구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정책적 여지를 열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부는 교육청을 압박하고,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을 배제하고 일방 추진한다면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커다란 노사갈등을 부를 것입니다.

## **9.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은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현장의 정책 실행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법제화를 근거로 보다 적극적 인력 지원과 재정 투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늘봄학교로 방과후과정 학생 수는 급속히 늘어납니다. 이를 무시하고 학령인구 감소만을 쳐다보며 교육재정을 줄일 게 아니라 늘봄학교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재정당국 등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시효 없이 지속적으로 제도화돼야 합니다.

## **10. 학교공공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돌봄 등 방과후과정(교육복지)은 교육이 아니고 학교의 과제가 돼서도 안 된다는 교사들의 협소한 주장은 중단돼야 합니다.**

가정의 의미가 변화된 시대, 각각 가정 여건으로만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초저출생 시대. 이제 학교의 역할은 국영수 등 국가 교육과정만 교수학습시키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엔 공적 양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학교는 그 거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 잘 적응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공적지원(교육복지)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학교공공성입니다. 과거 교육공공성과 더불어 이제 우리 사회는 학교공공성을 중요 과제로서 확립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학교의 큰 방향에 동의하며, 디테일의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바로잡아 공교육 시스템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공공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당국과 국회,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은 학교공공성의 주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선언과 토론 의지가 격려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외면당한다면 투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